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cheung@kipf.re.kr

- 01 서론
- 02 분석 결과
- 03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2023. 8. 31.

No.149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요약

- 본 연구는 10%인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및 세 부담 등을 전가시킴으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유효세율)을 분석하였음
 - 소득, 연령, 가구원 수,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분석함
-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면세 품목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평가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면세로 혹은 면세 재화를 과세로 전환할 때 거래 단계, 재화의 성격, 소득수준, 소비연령 및 가구원 구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직면하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면세제도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도 이전에 비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책당국의 면세제도 조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재호·정다운, 『부가가치세 유효 세 부담 변화 추이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01 서론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은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45여 년 동안 10%를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사회적 배려,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국민 후생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국가별로 추구하는 정책 목적, 사회·경제적 환경, 국민들의 인식 등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10%로 고정된 부가가치세 명목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등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궁극적인 부가가치세 세 부담을 분석하고자 함
 - 면세 거래가 거래 과정에 포함될 경우, 최종 소비자마다 면세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다를 수밖에 없음
 - 참고로 면세제도 없이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동일한 명목세율이 적용된다면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은 동일해짐

-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변화 및 고령화, 가구형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면세 재화의 소비 형태가 달라지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유효세율의 괴리가 산업별, 소득별, 연령별 그리고 가구형태별로 발생한다면 경

- 제적 비효율의 왜곡이 경제 전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면세 범위 조정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이러한 왜곡 현상을 파악하고 면세 범위의 조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라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함

02 분석 결과

1.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2019~2021년)을 분석하였음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가계동향조사 및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함
-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자주 이용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방법으로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음
 - 산업연관표의 중간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최종 거래 단계까지 포함되는 중간 과세 및 면세 거래의 비중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함
- 둘째, 새롭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음
 - 그동안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제약으로 기존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처음 시도한 연구로서 학문적 의의가 있음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중간 거래 단계의 세 부담 전가, 가격 전가, 그리고 각종 공제제도의 영향 등이 반영된 실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분석 결과

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 기존 방법과 새롭게 신고자료를 활용한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신고자료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기존 방법론을 사용해 추정한 유효세율의 크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었음
 - 신고자료를 활용한 방법은 중간 거래 단계의 가격 및 세 부담 전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같은 각종 공제제도의 영향 등을 고려한 방법임
 - 이러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방법보다 유효세율이 더 크게 산출된 것은 아마도 사업자들의 가격 및 세 부담 전가의 행태는 예상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정부 정책으로 세 부담이 일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나. 소득, 소비, 연령,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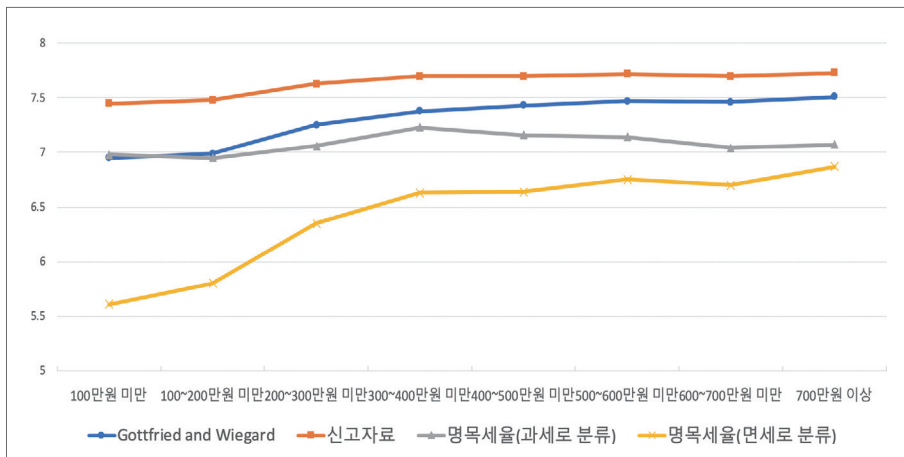
-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을 추정한 결과,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소비자의 소득, 소비, 연령, 가구원 수 등의 특징에 따른 이질성 분석 결과 해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절대적인 수치는 신고자료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기존 방법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됨

- 소비자의 소득수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1] 참조)
- 소비자의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비교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인 생필품 소비 비중이 큰 70대 이상 고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고, 그다음으로는 20대 젊은 연령층의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낮게 나타났음([그림 2] 참조)
 -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 20대의 소비 구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여 20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었음
 - 반면 30대는 음식·숙박비, 의류·신발, 오락·문화비의 지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30대에서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40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녀 교육 소비지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30대에 비해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은 작게 나타남

-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증가하여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를 최고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는 앞서 분석한 연령대 가운데 30대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부담한 것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음
 - 1인 가구의 부가가치세 유효세 부담은 약 7% 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는 앞선 연령대별 분석에서 살펴본 70대 이상의 고령층 및 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유효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과 유사함
 - 결과적으로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직면하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면세제도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도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책당국의 면세제도 조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소비지출별 분석도 소득수준별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그림 4] 참조)
 - 기존 연구방식을 사용했을 때 소비수준과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성이 관찰되었음

그림 1 소비자의 소득수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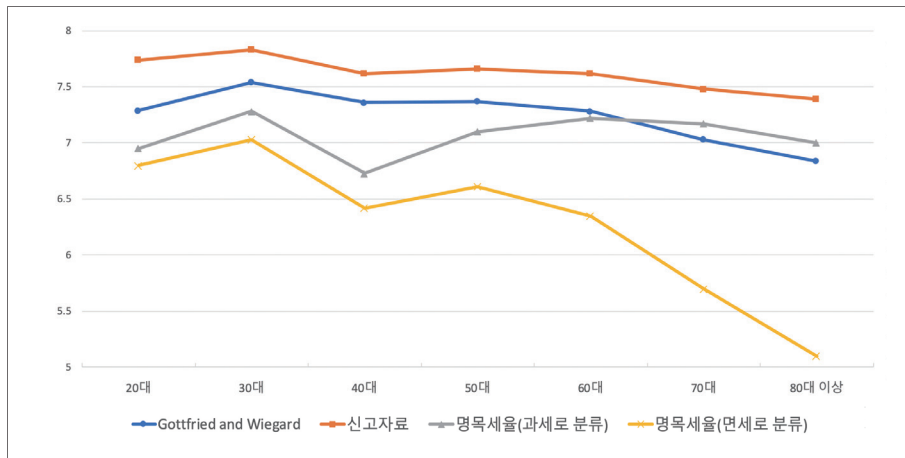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소비자의 연령대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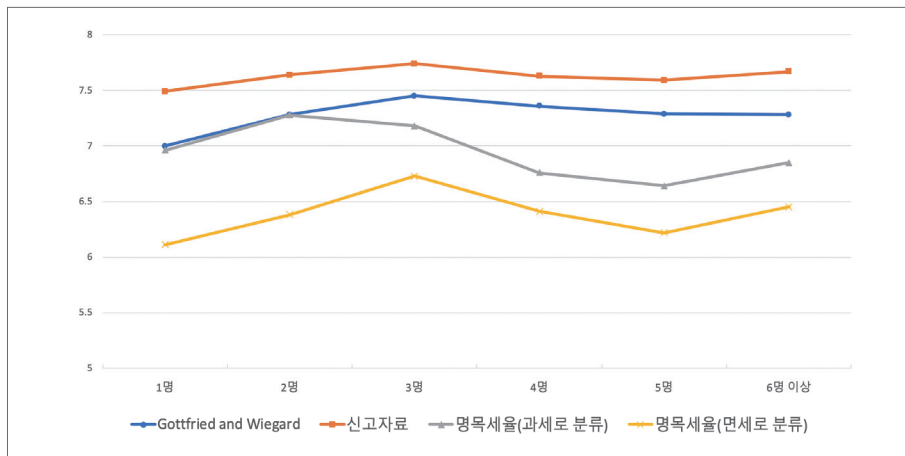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소비자의 가구원 수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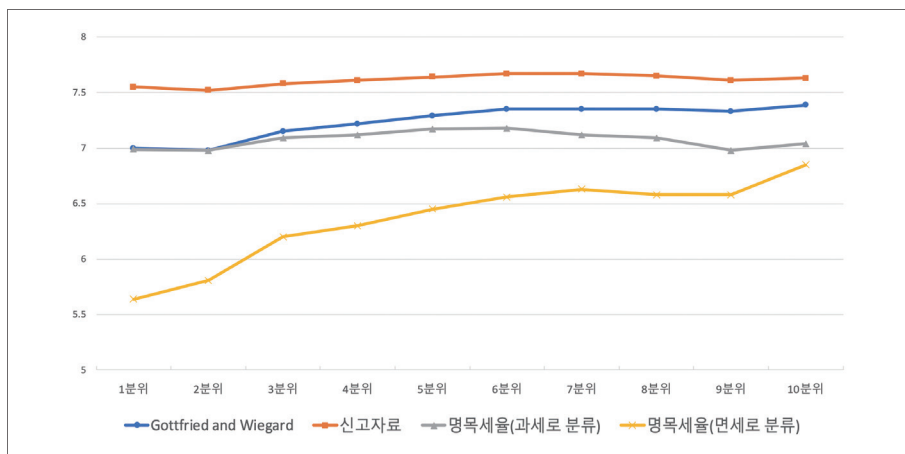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소비자의 소비지출별 유효세율 비교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다. 과·면세 변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

- 추가로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항목별로 부가가치세 과·면세를 구분하고, 과·면세가 혼재된 소비지출 항목들을 과세인 경우와 면세인 경우로 가정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추정하였음
 - 이 분석을 통해 면세 재화를 과세 재화로 전환하였을 때의 소득별, 연령별, 가구원 수별, 그리고 소비지출 별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재화 또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면세 품목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부담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저소득층, 고령층, 그리고 1인 가구 등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 완화 및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면세로 혹은 면세 재화를 과세로 전환할 때 거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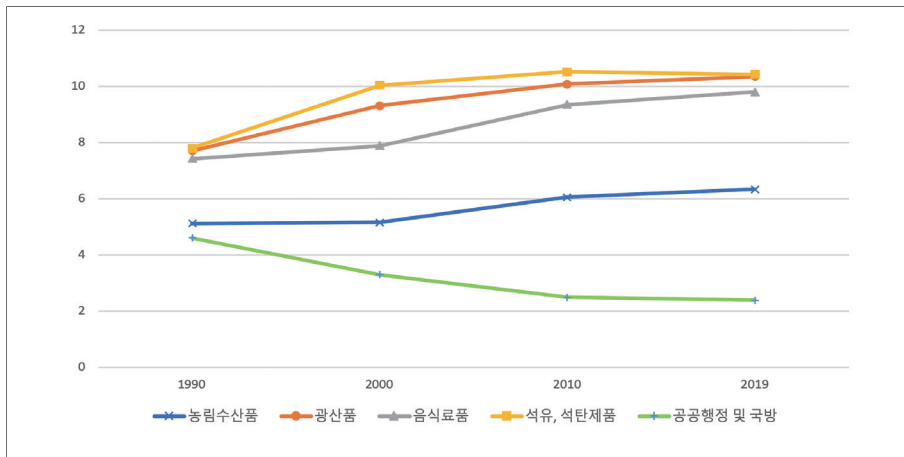
재화의 성격, 소득수준, 소비연령 및 가구원 구성 등도 종합적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라. 1990~201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결합하여 199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30년 동안의 제도 변화를 고려한 산업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Gottfried and Wiegard (1991) 방법을 사용함
 -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농림수산물, 광산품, 그리고 음식료품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은 증가하였지만, 공공행정 및 국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감소하고 있음
 - 다만, 같은 대분류 산업군도 30년 동안 그 구성이 변화하고 규모가 달라져 정확하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추세는 농림수산물 산업군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중간 투입물 중에서 과세 재화의 비중이 면세 재화의 비중보다 더 커져서 발생한 결과로 여겨짐

그림 5 주요 대분류 품목군별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박명호·정재호(2014), <표 III-5>, pp. 56~57 자료와 저자 작성 자료

03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본 연구는 10%인 부가가치세 명목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및 세 부담 등을 전가시킴으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유효세율)을 분석하였음
 - 소득, 연령, 가구원 수,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분석함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이 낮고, 부가가치세 과·면세 적용을 변경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면세 품목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소비수준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의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세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평가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면세로 혹은 면세 재화를 과세로 전환할 때 거래 단계, 재화의 성격, 소득수준, 소비연령 및 가구원 구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을 직면하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면세제도 조정에 따른 파급효과도 이전에 비해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정책당국의 면세제도 조정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새롭게 신고자료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유효세율의 크기가 기존의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게 추정되었음
 - 이는 아마도 사업자들의 가격 및 세 부담 전가가 예상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세 부담을 일부 감소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정책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필요하지만 면세제도가 유효세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보다는 상업적 목적이 강조되는 분야는 면세보다 과세를 우선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축소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세제가 아닌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박명호·정재호,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Gottfried, P. and W. Wiegard, "Exemption versus Zero Rating: A Hidden Problem of VA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6(3), 1991, pp. 307~328.

